

한반도 전쟁위기 본질과 대안이 궁금한 조합원을 위한 7문7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Q1 [한미관계]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한미(군사)동맹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한미 동맹은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핵심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 전략은 떠오르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우위에 서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이 '21세기는 미국의 태평양 세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에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 핵심 축으로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상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포위하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이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일본에서 통과된 안보법안은 군사훈련 중인 미군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호위하고, 반격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일본 본토 방위를 제외하고는) 타국과 같이 군사행동을 하는 것(집단적 자위권)은 금지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남중국해(홍콩과 동남아시아 사이에 있는 해역을 말합니다.)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는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과 북한의 반발은 거세질 것이고, 이들의 (핵)무장도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는 다시금 한미(일) 군사동맹의 능력 강화를 낳습니다. 군사적 대응으로는 또 다른 군사적 대응의 끝없는 순환을 불러올 뿐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종속된 한미 군사동맹은 전쟁을 막기는커녕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합니다.

Q2

[위안부문제]

박근혜정부는 문제투성이 위안부 합의를 왜 강행했나요?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만나 '위안부 합의'를 맺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수상의 명의로 된 사과편지와 위로금 10억 엔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아베)느니 '일본이 잃은 건 10억 엔 뿐'(기시다 후미오 외상)이라는 등 진심어린 사과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합의문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적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협상은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설득(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협상이라며 역대 정부 중 박근혜 정부만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정부가 없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가 문제투성이 합의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한일 양국이 졸속으로라도 위안부 합의를 마무리 짓고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시키기를 원했지요. 당장 이번 12.28 합의 이후 미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일 군사적 협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자국민들의 인권조차 무시한 채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투성이 12.28 위안부 합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12.28 위안부 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정한 피해 보상과 사죄의 방법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Q3 [군사훈련] 북한의 핵 위협 때문이라도 한미 공동 군사훈련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될수록 한반도 전쟁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역대 최대라 불리는 한미 공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독수리연습(FE)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새로운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훈련에 적용되었던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이 공격할 때 방어하고 반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나타날 조짐만 보여도 바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벌어지는 한미 군사훈련은 더욱 호전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미군 17,000명, 한국군의 절반인 300,000명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4월 30일까지 두달 가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미군이 자랑하는 5대 전략자산(B-2 스텔스 폭격기, B-52 장거리 폭격기,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존스테니스 호,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 호)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자산'들은 다름 아닌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유사 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 표명이죠.

한국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수록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군사훈련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76년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 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된 이래로 40년이 지났지만,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고 한반도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군사훈련만 해도, 북한은 크게 반발하면서 핵무기 능력을 개선하고 보복전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과 충돌로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Q4 [사드] 사드는 북한 핵 공격 방어를 위해 필요하지 않나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지역방어체계)는 남한이나 미국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을 쏘서 격추시키는 무기입니다. 한미 정부나 군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탐지하기 위해 고성능의 레이더(AN/TPY-2)가 함께 배치됩니다. 이 레이더는 두 가지 모드로 운용될 수 있는데, 종말탐지모드는 400km, 전진 배치모드는 2,000km에 달하는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진배치 모드로 변경될 경우 중국 영토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한미 당국은 모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환에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궁극적인 이유 역시 따져보면 방어용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MD라는 미 군사전략에서 사드의 역할은 전쟁 상황이 되면 주한/주일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뒤 상대 국가를 신속하게 공격하겠다는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는 당연히 북한이나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고, 그들의 군비 강화를 합리화하는 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를 배치한다면 “(남한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수록 동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불난 데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한미 양국은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한반도 사드배치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Q5

[북한 핵 실험]

북한은 도대체, 왜 핵실험을 자꾸 하나요?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민중에게 큰 우려를 던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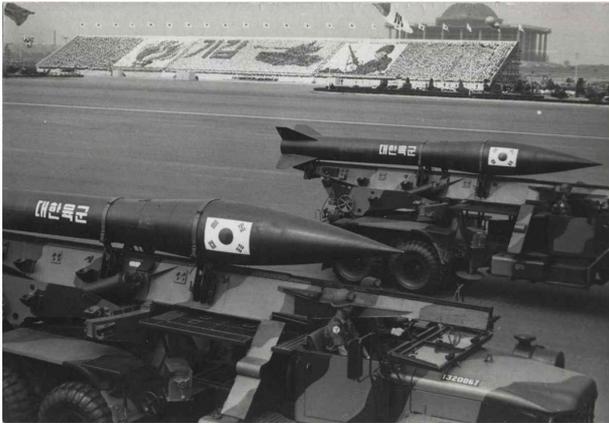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한반도 비핵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쌓인 불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악순환을 확실히 끝낸 후에만 핵개발 포기를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반면에 미국은 비핵화와 관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정치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도입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1950년대 후반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도입하기 시작한 후에 60년대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핵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핵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갔고, 한미의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하며 핵우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도 핵개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핵경쟁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완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양자·다자간 대화와 협상, 협상의 파기와 재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재제와 핵위협, 적대적 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과 같이 더욱 강도 높은 조치로 대응하였고 심각한 악순환이 형성된 것입니다.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나 북한의 고강도 조치는 각국 정책집단 내부에서 '상대방은 역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불신을 강화하고, 협상에 회의적인 매파 집단의 목소리를 키우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합의 이행 과정에서 보인 불성실한 태도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북한도 군사적 대응조치를 자제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게 영킨 실타래를 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 모든 핵보유국들이 핵개발과 실험을 포기해야 핵경쟁이 근절될 것입니다.

[그림] 한국 육군이 보유한 어네스트 존 (1973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



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f/Armed_Forces_Day_of_South_Korea_%281973%29_5.jpg/1200px-Armed_Forces_Day_of_South_Korea_%281973%29_5.jpg

어네스트 존(Honest John)은 핵공격이 가능한 지대지 로켓으로 미국이 최초로 개발한 핵 미사일입니다. 최초 발사는 1951년, 실전배치는 1953년 1월에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증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이러한 핵폭탄을 수천 기 생산, 나아가 생화학 탄두도 장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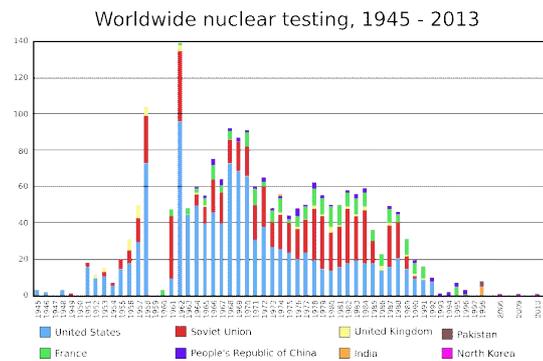
[표 1] 군산에 배치되었던 미 핵무기 현황 (1985년)

종류	규모		
	1977년 이전	1983년	1985년
공중중력폭탄	192	135	60
포	8인치	56	63
	155mm	152	31
	연장방사	?	?
지대지 미사일	92	?	?
지대공 미사일	144	0	0
핵지뢰	25-50	20	21
계	660-686	249	151

자료: 피터헤이스 저, 고대승/고경은 역, 『핵딜레마』, 1991, 한울출판사, p.166.

[< 표] 군산에 배치되었던 미 핵무기 현황 (1985년)

[▽그림] 1945-2013년 세계핵실험과 핵보유국의 위선



* 기존 핵보유국은 이미 엄청난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1,054회, 구 소련 715회, 영국 45회, 프랑스 210회, 중국 45회, 인도 6회, 파키스탄 6회. 미국은 현재도 임계전 핵실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Nuclear_weapons_testing

Q6 [평화협정]

평화협정, 정말 필요한가요?



최근 평화협정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북미 간에 의사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월 17일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평화협정 문제를 이해하려면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협정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정전협정으로 유엔군과 남한, 북한과 중국의 적대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사실상 전쟁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정전협정에는 3개월 내에 외국군대 철수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회담을 소집한다고 했지만, 1954년 한 차례 열리고 쌍방의 견해차만 확인 후 막을 내렸습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군사인원과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와 탄약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그 후 유엔군은 북한이 소련에서 신형비행기를 도입했다고 비난하며 1957년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1958년 북한에서 중국군이 철수했지만,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은 남한에 계속 주둔했습니다.

한편,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쌍방은 해상 군사분계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남과 북의 어선이 상대방에 끌려가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1999년과 2002년에 서해교전이 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전협정 이후에 계속되는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서 제기한 한미일 삼국의 핵무기 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대응으로 형성된 악순환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Q7

[노동자의 역할]

평화를 위해 우리 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제시대부터 우리 노동자는 항상 사업장 문제를 넘어 전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위해서 투쟁해왔습니다. 1930년대 일본 자본이 강요하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일본의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외쳐 싸웠고, 해방 직후엔 해고반대와 임금인상과 함께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여 미군정의 통제와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1980년대는 노동자는 남한사회의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매 시기 노동자들이 사회적 운동에 나선 이유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임금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부분적으로 쟁취해도 제대로 유지하거나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조되는 전쟁위기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교섭도 안 되고, 노조 활동도 안 되고, 노동개약을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와 지배 세력은 안보에 대한 공포를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을 탄압하고 테러방지법과 같은 사회 통제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기존 국가보안법도 모자라서 정부는 이번에 세계 테러 사건, 북한의 위협과 노동운동의 폭력성을 뒤섞어 이야기하면서 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것이 모든 국민과 특히 모든 노동자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직적 힘(즉, 노동조합)이 있는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및 민주노총과 함께 행동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반전평화를 요구합니다.**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사드 배치와 한미합동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위안부 합의는 백지화되어야,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필요 없습니다. 북미와 남북 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 **반전평화를 배우고 가르칩시다.** 빠르게 돌아가는 정세를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노조에서 정세 교육을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공공운수노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작하는 선전물을 받아 읽고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반전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와 한미합동훈련을 반대하고, 남북과 북미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종북’ 행위가 아니라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사업장, 노조, 지역사회 내에서 평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토론합니다.

▶ **반전평화를 위해 행동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 합동훈련, 사드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규탄하기 위한 다양한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전평화운동이 더 커지고 강화되도록 여러분이 속한 노동조합과 같이 참가해주세요.

▶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정부와 여당을 심판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위기 심화, 민주주의 파탄에 더해서 외교와 한반도평화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4월 13일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